

월/요/광/장

전지용



민족주의의 고전적 연구자였던 한스 콘 등은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합리화되면서 점차 민족주의가 문화적인 쪽으로 순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민족주의가 퇴화할 것으로 보았다.

본인들의 정서 속에서 정당화시키려는 상징적 의미가 개입되어 있다. 중국도 민족주의적 조류를 정부 스스로 강화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중국이 공산당 일당체제이면서도 경제발전이 총력을 기울이며 정치적 영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좌익의 변질된 민족

세계화시대, 강해지는 민족주의

주의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정치적 영토를 과거 중국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영역과 일치시켜 어떤 분쟁의 씨앗도 애초에 자리할 수 없게 하고자 원하고 있다.

동북아의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외로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의 민족주의적 흐름이 일본과 달리 우익 혹은 경제발전론자

들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적지 않은 표심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현 정부가 그 표심들을 모을 때 믿음

김주 선생이 서거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적 조류가 오랫동안 비주류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체계화된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고 이론을 정연하게 다듬지도 못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의 한국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관련,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족주의적 조류가 반미(反美)적 정서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단순하게 현상을 파괴하겠다는 맹목적 지지로 흐름에 열려있는 이유이지만, 일본의 그 흐름도 과거처럼 제국주의의 정치적 체제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수용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인지, 아닌지

는 복잡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를 포함한 경제계 등은 대체로 수용 불가파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과거 자신들의 '정체성'에 집착하면서도 세계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집단들과 완강하게 정체성에 집착하는 집단들, 그리고 아예 정체성을 버리고 신속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집단들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분야에 관한 현실적이고 솔직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당연히 한국 농민들 대부분은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겠지만 도시민들과 경제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익이 주어진다.

(조선대 사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참여정부 평가 남은 1년이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25일 출범 4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난 4년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어느 정부나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참여정부의 공(功)도 적지 않다. 권위주의가 청산됐고 선거문화도 쇠진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취임 초 80%를 오르내리던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현재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남은 1년이다.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남도 국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끝나서는 노 대통령은 물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최소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구멍 뚫린 민생치안 시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주차된 차량이 하룻밤 새 무려 9대나 털리는 등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다가 살기 힘든데 강·절도범마저 날뛰면 시민들의 민생 체감지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 달 반 사이에 노래방 6곳에 강도가 들어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의 방법망을 비롯듯이 같은 지역에서 잇따라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민생치안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래방 강도 사건은 연말연시와 설날을 맞아 특별 방범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시민들이 밤거리를 맘 놓고 다니지 못하고 시민을 괴롭히는 범죄가 횡행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완벽한 민생치안은 경찰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그것도 동일한 범을 보이는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민생치안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뢰받는 경찰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최인규. 재판은 하다보면 심증(心證)은 가지 만 물증(物證)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증에 심증을 보탠들 결정적인 물증 하나를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천만 원을 찾아 어떤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겨 두었다. 다음날 아침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여관 주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거부하였다.

기고 이성수. 최근 '지리적표시제' 등록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리명칭을 상표처럼 등록해 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지역 특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해 걸 포장지에 생산지역을 표시해 품질을 보증해준다. 국내 지리적 표시 1호는 2002년 1월 등록된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2007년 1월말 현재 전국에 35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그러면 그렇지...” 둘려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손님이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여관 주인을 상대로 다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손님은 여관 주인으로부터 받아 둔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번에는 돈을 돌려주었고도 현금보관증을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던 그 여관 주인이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증거에 기초해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다스 놓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농산물도 명품시대. 무첨가, 철원쌀 등 지명만으로도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르는 품목들이 있다. 이들 지리적표시에 사용되는 지명의 명성은 지리화적인 중요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농산물)에 의해서 유명해진 지명들이다.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수취가격 제고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명품 농산물의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대형 정유사 파렴치한 담합 행위 강력 제재해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보니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으로써 기름값을 조작해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겼더니 충격적이다. 그 담합 수법도 교묘하다. 매달 사장단 회의나 영업일원·팀장 회의 등을 통해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아예 배신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호 감시까지 했다나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안 것이다. 담합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인교통수당을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노인교통수당은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급도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교통요금이 80년대에는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수 있겠으나 요즘 교통수당은 노인들에게 그다지 요긴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정작 긴요한 노인복지사업은 못하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광주시의 1개 구청만 해도 20-3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 그 돈 전체를 교통비로 사용해서 날뛰게 아니라 복지예산으로 여가활동시설로 건립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는 무료 또는 할인이 되고 있고 교통요금 정도는 노인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고 있으니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한 때다.

無等鼓 후보 검증 논란.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월터 먼데일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고향을 공격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한마디의 멋진 수사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나는 나이를 선거이황으로 삼지 않았다. 나는 경쟁 후보의 젊음과 무경험을 정치적 목적으로 써먹지 않겠다'는 촌철살인이었다. 레이건은 상대의 내거티브 공격에 맞지게 한방 먹였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보통 포지티브보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내거티브가 더 먹힌다. '어두운 배경 아래 죄수들이 울 줄로 서 있다. 철제 회전문을 통해 죄수들이 드나든다. 죄수 중 하나가 평온한 가정의 거실에 침입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스업된다.' 1988년 미국 대선 때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진영이 만든 유명한 내거티브 TV 광고 '귀휴(歸休)의 장면이다. 가장정에 잠입한 흑인은 일급 살인범 윌리 호튼. 호튼은 부시의 상대인 마이클 두카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일할 때 '귀휴 패스'를 통해 일시 가석방됐다다가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 이 광고 하나로 두카키스는 범죄에 유약한 인물로 몰렸고 결과적으로 낙선했다. 실재는 어쨌든가, 두카키스가 주지사로 재임했던 10년동안 귀휴가 허용된 범죄자는 268명. 그중 재범자는 호튼 한 명 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거티브 선거의 역사는 길다. 그중에서도 1960, 70년대 선거관을 풍미했던 '엄창록'이란 인물이 있다. 순전히 '선거용'으로 중앙정보부에 특채된 그는 야당 진영을 교란하는 데 일인자였다. 흑색선전과 뒤집어 써우기가 그의 전공. 상대 후보 이름으로 동분투를 했다가 빼앗고 유권자들을 초청했다가 헛걸음질하게 만든 것이 주특기였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후보 검증 논란이 뜨겁다. 정당한 검증기준이, 내거티브인식 선택은 결국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취재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취재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